

## 5개 공공발전사 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 임금삭감 복지축소 압박에 '위기감'

정부와 공기업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발전사들이 기업별노조에서 벗어나 상급단체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발전 등 5개 공공발전사 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 정상화 압박이 거세지던 지난달 말 긴급연대회의를 갖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상급단체 재가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발전사 노조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떨어져나간 뒤 한국발전산업노조라는 산별노조를 구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발전사별로 기업노조가 생기면서 발전산업노조의 세는 급격히 위축됐다.

현재는 5개 발전사 전체 조합원의 15% 정도만 발전산업노조에 소속된 상태다. 상급단체 가입이 성사된다면 3년 만의 복귀인 셈이다.

상급단체는 한전 노조가 가입돼 있는 한국노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5개 발전사 노조가 전부 상급단체 가

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공 발전사 노조가 상급단체 재가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단위노조 체제로는 정부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부실의 책임을 과도한 복지제도 탓으로 돌리며 임금삭감, 복지혜택 축소 등을 압박하는 현 상황을 돌파하려면 발전사노조 간 연대를 넘어 더 큰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공동의 목표가 워낙 뚜렷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그동안 발전사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연대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발전사별로 상급단체에 가입하려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중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 노조는 임기가 만료돼 다음 달 집행부 교체가 예정돼 있어 조합원 투표 시기는 4월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공기업 개혁 노조의 '역공'

### "개별노조 힘으로 정부 압박 대응 못해" 발전사 노조들, 상급단체 가입 움직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회사 노동조합들이 기업별 노조에서 벗어나 상급단체에 다시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통한 사실상의 연대투쟁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노조 간 거센 대치와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동서·남부·서부·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 노조는 지난달 말 긴급연대회의를 갖고 '상급단체 재가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노조 때리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업별 노조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힘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들 노조는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뒤 '한국발전산업노조'라는 산별노조를 구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전사별로 기업노조가 꾸러지자,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동했다. 현재 개별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7,500여명)은 발전산업노조(1,300여명)의 6배에 달한다. 만약 이번에 상급단체 재가입이 이뤄지면 3년 만에 다시 산별노조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상급단체 가입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일단은 노조위원장들 간의 문제의식 공유였고 아직 조합원들의 의견이 어딘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발전사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려면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게다가 중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 노조는 다음달 집행부 교체가 예정돼 있어, 투표는 아무리 빨라도 4월이나 가능한 상황이다.

재가입 상급단체가 어느 곳이 될지도 예단키 어렵다. 일각에선 '과거 민주노총에서 떨어져 나온 만큼 이번엔 한국노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적 논의를 해야 하므로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38개 공기업 노조들은 정부의 복리후생 축소 압박과 관련, 정부의 경영평가와 함께 사측과 개별 단체협상도 거부한 상태. 발전공기업들은 일단 지난달 출범한 전국발전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이지만, 향후 상급단체를 통해 공동대응의 수위를 맞춰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00년대 두 차례 상급단체 가입을 추진했다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노조는 대신 지난달 초 출범한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발전사들과 보조를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 세계일보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015면 경제

## 5개 공공발전사 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

### 정부는 "실력 행사 불용" 경고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을 추진한다.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자 '비정상적 정상화'를 독려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측이 복지 혜택 축소를 담은 개선책을 마련해 노사 협의에 나서자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발전 5개 발전사 노조는 지난 1월 말 긴급회의를 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개별 노조로는 사측에 대항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상급단체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달 노조선거를 마치고, 4월부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거래소 노조가 실력행사에 나섰다. 사측의 일방적인 복지비 지원 중단에 지난주 단체협약 위반을 들어 항의문을 보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노조의 저항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개 경고한 만큼 노조의 실력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5개 공공發電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

### 방만경영 개혁 압박 위기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해 공공기관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공발전사들이 기업별 노조에서 벗어나 상급단체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발전 등 5개 공공발전사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압박이 거세지던 지난 1월 말 긴급 연대회의를 열고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상급단체에 재가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발전사 노조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떨어져 나간 뒤 한국발전산업노조

라는 산별노조를 구성해 민노총에 가입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발전사별로 기업노조가 생기면서 발전산업노조의 세는 급격히 위축됐다. 현재는 5개 발전사 전체 조합원의 15% 정도만 발전산업노조에 소속된 상태다. 상급단체 가입이 성사된다면 3년 만의 복귀인 셈이다. 상급단체는 한전 노조가 가입된 한국노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5개 발전사 노조가 전부 상급단체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공 발전사 노조가 상급단체 재가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단위노조 체제로는 정부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실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목하면서 임금 삭감, 복지혜택 축소 등을 강하게 압박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려면 발전사 노조 간 연대를 넘어 더 큰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공동의 목표가 워낙 뚜렷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그동안 발전사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연대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발전사별로 상급단체에 가입하려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중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 노조는 임기가 만료돼 오는 3월 집행부 교체가 예정돼 조합원 투표 시기는 4월쯤이나 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민철 기자 mindom@

## 경향신문

# 공공기관 이면합의, 원칙·기준 없어 혼란

### 경영평가 우수사례, 정권 바뀌자 '지적' "단협 외 무조건 올려라" 자진신고 지침

공공기관 사측과 노조 간 '이면합의'를 자진 신고하라는 정부 방침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가 노동법이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합의를 했더라도 단체협약이 아니면 모두 '이면합의'로 간주하는 등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1년 2월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합의서'를 별도합의라고 게시했다. 노조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간 600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전원의 3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는 노사가 2년마다 하는 단체협약 중간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자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 노사 충돌 없이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경영평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던 내용이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면합의'가 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13년 1월 '기관이전에 따른 노사협약서'는 당시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에

서 노사가 합의해 만든 것이다. 직원 지원 방안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기존 대전 이전 기관과 형평성에 맞춰지만 이면합의 취급을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이후 입사자의 임금을 복원한다는 내용의 2012년 12월 임금협약서를 별도합의라고 정부에 신고했다. 임금협약은 '매년 별도로 협의한다'는 단협 조항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이면합의 등을 2014년 1월 말까지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들은 60여건의 이면합의를 정부에 신고했지만 상당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뤄진 내용이어서 과잉복지 등과는 관련이 없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단협 사항 외에는 무조건 올려라"고 해서 게시했는데 이면합의로 둔갑하니 억울하다"며 "기재부가 노동법을 모르거나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들을 '이면합의'라 규정하기는 아직 이른 게 사실이다. 급하게 하다보니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 “공기업 부채 106조 중 46조는 부실경영 탓”

감사원, 9곳 6년간 늘어난 빚 분석  
석유公-광물公 빚은 전액 자체요인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공기업 노조는 정부가 공기업에 빚을 떠넘긴 뒤 책임을 미룬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공기업 노조를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의 정공법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가 정부 탓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12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9곳의 금융 부채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이나 요금 통제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늘어난 빚은 60조527억 원이었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방만한 국내외 사업 등 내부요인으로 인해 늘어난 빚도 46조2020억 원에 달했다. 106조2547억 원 가운데 외부요인 비율은 57%, 내부요인 비율은 43%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내부요인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주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2007년부터 6년간 공기업 9곳의 금융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LH와 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 2012년 LH의 영업이익은 1조4085억 원이었다. 하지만 그해 이자 비용만 4조4881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3배가 넘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mailto:egija@donga.com)  
▶A5면에 계속

## 東亞日報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A05면 종합

공기업 9곳의 금융 부채 원인별 분석 (단위: 원) 2007~2012년. ▲는 부채가 아닌 이익. 자료: 감사원

구분	한국 전력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공사	한국 철도공사	한국 가스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석유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대한 석탄공사	합계	
외부 요인	정책사업	-	8조 5525억	3조 6500억	1조 2928억	-	29조 3071억	-	-	1745억	42조 9769억
	요금통제	8조 24억	4643억	1조 2949억	1조 5617억	5조 7525억	-	-	-	-	17조 758억
내부 요인	해외사업	1조 4472억	-	-	-	1조 9603억	-	8조 7542억	6246억	24억	12조 7887억
	자체사업	5조 9326억	1조 2828억	1조 8589억	9911억	5조 771억	19조 5905억	▲1조 9509억	5575억	737억	33조 4133억
외부요인 대 내부요인 비율 (%)		52:48	88:12	73:28	74:26	45:55	60:40	0:100	0:100	70:30	57:43
합계		15조 3822억	10조 2996억	6조 8038억	3조 8456억	12조 7899억	48조 8976억	6조 8033억	1조 1821억	2506억	106조 2547억

## LH 무리한 자체사업 19조 빚더미

공기업 부채 분석 ▶A1면서 계속

감사원 “빚 증가 정부 탓 못해”

원인별 책임 소재 분명히 하기로

감사원이 이들 공기업 9곳의 금융 부채를 원인으로 따져봤더니 정부 시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얻은 빚이 42조9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곳이 수공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며 금융 부채가 8조5525억 원 늘었다. 박 대통령이 10일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금융 부채를 늘린 두 번째 원인은 공기업들이 자체 사업을 방만하게 벌인 결과였다. LH가 자체 사업을 벌여 6년간 늘어난 금융 부채만 19조5905억 원이었다. 이어 한전 5조9326억 원, 가스공사 5조771억 원, 한국도로공사 1조 8589억 원, 수공 1조2828억 원 순이었다. 석유

공사는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다 6년간 금융 부채가 8조7542억 원 늘었다. 가스공사와 한전도 방만한 해외사업 탓에 빚이 각각 1조 9603억 원, 1조4472억 원 증가했다.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늘어난 빚은 100% 내부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 탓을 할 수 없는 공기업들이다. 가스공사도 정부의 요금 통제정책에 따라 늘어난 빚(5조7525억 원)보다 국내외 사업을 벌이다 늘어난 빚(7조374억 원)이 더 많았다. 한전이나 LH도 내부요인에 따른 빚 증가가 각각 48%, 40%에 달해 정부 탓만을 하기 힘든 곳으로 꼽혔다.

감사원이 공기업 부채의 원인별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말 LH, 한전, 수공 등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부채의 원인을 따져 회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기업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구분한 뒤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나 공기업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수원 675건, 공기업 비리·징계 1위 건보공단 383건, 준정부기관서 최다

## 정부 각각 30곳·33곳 감사 5년 간 실태 분석 보고서

정부가 30개 공기업과 33개 준정부기관(예산 규모 2000억원 이상)에 대한 감사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공기업에선 한국수력원자력, 준정부기관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2일 입수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 내역을 취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시정·주의·권고통보 등의 감사 결과 처분 77건과 처분요구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 598건 등 총 675건으로 30개 공기업 가운데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공기업에선 이어 한국전력공사(577건), 한국동서발전(494건), 한국토지주택공사(292건), 한국남동발전(231건), 한국수자원공사(231건), 한국도로공사(228건), 한국철도공사(211건), 한국공항공사(209건), 한국가스공사(144건) 등이 감사 적발 상위 10위에 해당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당한 뒤 사법 당국의 처벌까지 받은 경우만 놓고 보면 한국수력원자력(38건)과 한국철도공사(24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마사회 등이 4건씩이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선 감사 결과 처분 70건, 처분 요구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 313건 등 383건의 적발을 당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위였다. 이어 대한지적공사(309건), 한국철도시설공단(206건), 국민연금공단(168건), 한국전기안전공사(167건), 근로복지공단(147건), 한

30개 공기업 33개 준정부기관, 감사처분·범죄통보 등 건수

공기업	합계	준정부기관	합계
한국수력원자력	675	국민건강보험공단	383
한국전력공사	577	대한지적공사	309
한국동서발전	494	한국철도시설공단	206
한국토지주택공사	292	국민연금공단	168
한국남동발전	231	한국전기안전공사	167
한국수자원공사	231	근로복지공단	147
한국도로공사	228	한국농어촌공사	131
한국철도공사	211	국민체육진흥공단	127
한국공항공사	209	한국주택금융공사	97
한국가스공사	144	한국환경공단	91
한국석유공사	124	한국자산관리공사	83
한국마사회	93	교통안전공단	71
한국중부발전	73	예금보험공사	70
인천국제공항공사	6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
대한석탄공사	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1
한국서부발전	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한국지역난방공사	48	한국예탁결제원	51
한국남부발전	47	한국거래소	42
부산항만공사	45	한국연구재단	35
한국조폐공사	44	도로교통공단	34
대한주택보증	39	한국장학재단	30
한국관광공사	38	한국콘텐츠진흥원	23
한국광물자원공사	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제주도시개발센터	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여수광양항만공사	30	한국산업인력공단	19
인천항만공사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해양환경관리공단	13	한국산업단지공단	17
방송광고진흥공사	13	한국정보화진흥원	16
한국감정원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울산항만공사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국광해관리공단	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

\*최근 5년간 건수 합계  
\*준정부기관은 예산 2000억원 이상  
\*자료: 감사원

국농어촌공사(131건), 국민체육진흥공단(127건), 한국주택금융공사(97건), 한국환경공단(91건)이 2~10위였다. 사법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16건씩, 대한지적공사가 11건의 순이었다.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때문"이라며 "방만경영의 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넘은 비리 백태=감사원에 적발된 공공기관 임원들의 횡령 백태는 다양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차장이었던 A씨의 경우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A씨는 2007년 11월 납품과 관련해 한 업체의 임원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만큼 주식을 무상으로 쥐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식을 사라"는 권유를 받고 주식 3360만원어치를 샀다. A씨는 5년 후인 지난해 6월 이를 1억4020만원에 되팔아 1억66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런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대한석탄공사의 실장이었던 B씨는 2006년 1월 연구비 사용 실적과 관련해 납품업체 사장과 짜고 2억1176만원어치(25건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썼다. 이후 '수수료'를 떼고 1억761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2006년부터 5년간 3억742만원을 빼돌렸다가 2012년 2월 면직 처분됐다.

지난 4월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RFID) 구축 사업에서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한 건보공단 수원동부지사의 C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지적공사 차장이었던 D씨는 2009년 2월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때 지적측량용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준을 바꿔 최하점을 받은 업체가 사업권을 따게 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정하·권호 기자

제출받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사례만 다를 뿐 매년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와 주인이 없다는 조직적 특성

# 한해 영업이익 1500억 인천공항철도

# 알짜 기업 만드니까 이젠 민간에 판다고?

## 코레일 '공항철도 매각 방침' 논란

연매출 3262억원, 영업이익 1508억원. 인천공항철도는 2012년 일반 영리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인천공항철도는 '방만경영'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코레일의 자회사다.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는 코레일은 이 알짜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겨레>와 통화한 다수의 코레일 관계자들은 마지못해 공항철도를 매각한다는 뜻을 비쳤다. 2009년 1조2000억원에 매입한 인천공항철도가 한해 1500억여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다시 매각하는 것이 마뜩잖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다. 실제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매각에 소극적인 코레일의 태도가 이해된다.

인천공항철도는 철도 분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1998년 7월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자사업단이 구성됐고, 2007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에 들어갔다. 총 건설비 4조995억원 가운데 민간투자비는 3조110억원, 정부의 건설보조금은 1조885억원이었다. 또 정부는 운영기간 30년 동안 수송수요예측의 90%를 보장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약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당시,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자 사업자를 끼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2007년 개통 뒤 하루 수송객 실적은 1만3000명에 불과했다. 수요예측 결과로 나온 21만명의 6.3%에 불과했다. 정부는 수요예측의 90%까지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모자라는 연간 수송수익 104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개통 이듬해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2008년 실수요는 1만7000명, 수요예측 23만명의 7.3%였다. 정부는 또 1666억원을 까먹었다. 향후 28년 동안 최소 13조8000억원이 보조금으로만 지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코레일이었다. 정부는 당시에도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겪던 코레일에 1조2000억원을 부담시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시켰다. 최소운영수입보장도 58%로 낮췄

## 코레일의 공항철도 인수에 따른 재정 부담 변화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연평균 보조금	보장 총액
민자사업자 (2008~2009년)	90%	4610억원	13.8조원
코레일 (2009년 이후)	58%	2237억원	6.7조원
차이	32%포인트	2373억원	7.1조원

\*인수 시점은 2009년이며, 인수 뒤 재정 부담 감소 자료: 코레일

## 연도별 하루 이용객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만 3000	1만 7000	2만	2만 7000	8만 9000	13만 4000	15만 7000

(단위: 명) 자료: 인천공항철도, 코레일

## 적자 수령 민자사업 인수 환승시스템 구축등 정상화 노력 승객수 개통 7년만에 10배 성장 지분 쪼개 매각 '우회 민영화' 전형 "흑자노선 팔고 적자노선 폐지하나"

다. 이에 따라 30년 보조금 총액도 7조1000억원 정도 줄었다. 코레일은 공항철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했다. 지하철 4호선, 5·6호선과의 환승 시스템을 편리하게 구축했다. 공덕·서울역까지 노선이 연장된 효과도 톡톡히 누렸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1만3000명 타던 승객이 2013년 15만 7000명으로 7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공기업이 운용하던 철도노선의 지분을 쪼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우회 민영화'다. 코레일이 정부에 제출한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 방안은 70~80% 지분을 민간에 넘기고, 코레일이 운용은 계속 맡는 방식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원은 "지분이 민간에 이전되는 것만으로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시작으로 흑자노선은 민간에 팔고 적자노선은 폐지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던 일"이라며 "수서발 케이티엑스 분할에 성공한 국토교통부가 2단계 민영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철도공단 임금체불 訴 직원 승소

## 법원 "인상분 13억 지급하라" 노조 "소송비 구상권도 청구"

초유의 공공기관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11부(부장 이현우)는 12일 "말린 임금 인상분을 지급해 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직원 박모씨 등 992명이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안을 노사가 수용했음에도, 공단 측이 1.3%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는 체불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사가 받아들인 중노위 조정안과 관련해 자동 근속승진제도 폐지와 같은 단체협약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철도공단은 임금 인상분 13억 70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공단은 중노위가 "임금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 인상분은 2011년 말까지 전액 지급돼야 한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윤정일 철도공단 노조위원장은 "국민의 혈세 2억원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된 만큼 책임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국민일보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015면 경제

# "근로장려금 받는 저소득 근로자, 배우자 맞벌이 시간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인 근로장려금(EITC)이 오히려 수급인 배우자의 근로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보훈 연구원과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최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근로장려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수급 가구 2차 소득자(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이 수급 가구주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킨 것이다. 추가소득(근로장려금)이 생김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배우자가 맞벌이에 나서는 대신 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 현보훈 연구원은 12일 "근로장려금 지급구조를 결정

할 때 2차 소득자에게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면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에 차등 지급하도록 올해 개편된 지급구조가 배우자의 노동공급 감소 유인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귀속분(내년 지급)부터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급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연간 총소득이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주택은 1주택 이하)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별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 통상임금, 올 春鬪 뇌관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 예상 (단위=%)



\*자료=대한상의(300개 기업 조사)

## “명절상여금 제외” 판결에 勞 투쟁모드 기업들 10곳중 8곳 인건비 증가 큰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까지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수용을 거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내고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집단협박 시기에 맞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 중 상당수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결국 봄부터 시작될 집단협박에서 노사

간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어 대규모 쟁투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86.1%에 달했다.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 이라는 기업은 17.3%, 15~20% 상승을 예상한 기업은 11.3%, 10~15% 상승은 12.7%여서 전체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집단협을 시작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은 발 빠르게 노사협의회를 열고 1차 의견을 조율했지만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협회 주도로 열린 통상임금 설명회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지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노사 양측의 혼란과 대립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호승·서동철·이동인 기자

## ▶ 재계-노동계 통상임금 4대 쟁점

### 쟁점① 퇴직자에게 주지 않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정근로 대가로 주는 임금을 퇴직자라고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 아님
------------------------------------	---

### 쟁점② 소급 청구 여부

노사 간 합의 없이 정해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어긋나 소급 청구 가능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등이 있으면 소급 청구 불허
---	--

### 쟁점③ 신의칙 적용시점 및 기한

판결 전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있어도 노조가 교섭요구 및 이의제기를 한 시점부터는 무효	노사합의 만료시점이 판결일 이후일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신의칙 적용
---	---------------------------------------

### 쟁점④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직무급 도입 어려운 곳 많아	현재 임금체계에 직무·성과가 반영 안 돼 도입 필요
----------------------------	------------------------------

勞

使

# 퇴직자 상여·소급청구 등 곳곳 지뢰밭

## 고용부 지도지침에 노사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현장의 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협 시기가 다가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내렸지만 설익은 지침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도지침을 내렸지만 부실한 측면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도지침이 나왔지만 이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쟁점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상여금을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고용부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으로 받는 정기상여금이나 직무수당 등을 현재 재직하지 않는다고 기업이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1981년 판례를 들어 고용부의 지침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통상임금 미적용분의 소급 적용'을 두고도 재계와 노동계의 해석은 갈린다. 재계는 고용부의 지도지침에 맞춰 통상임금 미적용분의 소급 적용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경우에 추가임금 청구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노동부가 신의칙을 확대 해석·적용한 지침을 내리며 재계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의칙 적용시점 및 기한'도 쟁점 중 하나다. 고용부 지도지침은 "판결일 이전에 이뤄진 노사 합의의 만료시점이 판결일 이후일 경

우에는 그 시점까지 '신의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계 역시 고용부 지침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판결선고일 이전에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있다고 해도 노조가 판결 이후 새로운 교섭요구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도 재계와 노동계는 대립하고 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계는 이 기회에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나 직무급제 모두 사업장 특성에 따라 도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지도지침으로 확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버티고 있다.

장재용 기자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으로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1,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KRC 가석 모씨에게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140만9510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 관련기사 A3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회사가 맺은 집단협 조항에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였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건 중 '고정적'이란 요건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현장에서의 통상임금 논란은 가라앉지 않아 산업 현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현장 혼란을

# 통상임금 판결 두달... 노사정 합의 없어 혼란만 가중

## ▶ 勞使 모두 통상임금 지침 불만족

현대자동차는 최근 윤갑환 사장(울산공장장), 이경훈 금속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노사협의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노사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11일자 노보를 통해 "회사 측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각종 시행세칙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협상은 통상임금 반환에 초점을 맞춰 상여금의 산입시점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부품업체 A사도 최근 열린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한 전례가 없다"며 "앞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그동안 관행을 들어 모든 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놓고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회사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3공장 아반떼 생산라인에서 조업을 하는 모습. <매경DB>

재계 “임금인상 억제·채용축소 불가피”  
노동계 “통상임금 적용 시점 앞당겨야”  
현대차, 노사참여 임금개편토 신설키로

통상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양대 노총과 현대차 등 강성 노조들이 강경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올해 제조업 현장 곳곳에서 생산라인 중단과 파업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월 중순 현재 노조와 공식 협상이나 물밑협상을 벌인 재계 측은 "통상임금 범위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더 크다"며 올해 파업 대란과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나섰다. 각종 협회 주도로 열린 통상임금 설명회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엇갈리면서 노사 양측의 혼란과 대립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2일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계 조정' (40.0%)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지 최소화' (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 (10.2%), '인력구조조정 또는 신규 채용 중단' (6.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곳은 6.4%에 그쳤다. 노사간 대화로 통상임금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것이라는 답변은 20.7%에 불과했다. 대기업 노사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자동차는 통상임금 이슈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임금체제개편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보전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 온 모호한 개념의 각종 수당들이 대기업보다 더 많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더욱 크게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화공단 내에서 5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금형업체 B사는 급여명세표에 포함된 '성실수당'을 놓고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회사 측은 '가족수당'과 유사하게 기본급 보존 차원에서 지급돼 온 복리후생수당인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 '성실' 개념 자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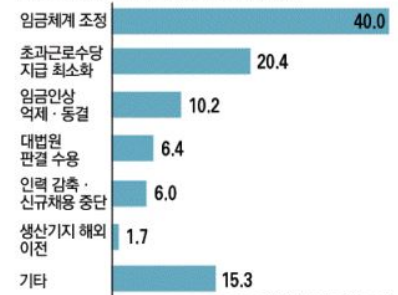
근로에 대한 보수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노동계도 본격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이달 말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 노총은 각 산하 조직에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 민주노총도 오는 25일 총파업 이후 통상임금 정상화를 목표로 '2014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한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 역시 한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환·김동은·전정홍 기자

기업들의 통상임금 대응 계획 (단위=%)



# 기업 86%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오를 것”

## 경제 단체들, 통상임금 첫 적용 앞두고 어려움 호소

# 경총 “올 임금인상 2.3% 이내가 적정” 商議 “기업 57%, 노조와의 갈등 우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10~15% 상승이 12.7%였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3.9%에 불과했다.

노사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소송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더라도 과거 3년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노사 간 이견은 여전했다. 소급분 소송 여부를 묻는 항목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는 응답이 8.1%에 달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도 9.2%를 차지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 10곳 중 4곳꼴로 인건비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1%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답변 중 20% 이상 상승이 17.3%, 15~20% 상승이 11.3%,

경제 단체들이 올해 노사(勞使) 간 임금 협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작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후폭풍이 기업 현장에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300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10% 이상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1%였다. 증가 폭이 ‘5~10%’ ‘5% 미만’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각각 22.4%였다. 응답 기업의 40%는 ‘임금 체계를 조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혀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의 57%는 “이 과정에서 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희범 회장은 12일 열린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번 노사 합의가 앞으로 통상임금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올해 입단협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60세 정년 의무화,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관련 이슈도 많아 기업 경영에 부담과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올해 기업의 임금 조정률은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실질 GDP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반영해 2.3% 범위 내로 이뤄지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한국 기자

## 한국경제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A08면 경제

### 경총 임금피크제 도입 예시 (단위:%)

구분	예시1. 정년연장 2년 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예시2. 정년연장 기간만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정년 이전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			정년 이전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		
연도	2015-2016	2017	2018	2019	2015-2016	2017	2018	2019
연령별 임금지급률	85	80(58세)	70(59세)	60(60세)	100	70(58세)	60(59세)	50(60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부담을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연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의 60% 수준으로 설정, 57세 정년 기준

# “올 임금인상 2.3% 이내로”

## 경총,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모델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기업들이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2016년 대기업부터 도입 예정인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모델’도 내놓았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포텔에서 열린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2년 경총이 제시한 적정 임금 인상률 2.9%보다 0.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회장은 “2.3%는 실질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 국민 경제생산성 증가율(3.6%)에서 정기급분(1.3%)을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의무화,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임금피크제 모델’도 공개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막대한 기업 부담과 신규 채용 기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1안과 기존의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2안으로 구성됐다. 국내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채택한 57세 정년을 기준으로 1안을 적용하면 56~57세는 피크임금 대비 85%를 지급하고 58세 이후에는 75%부터 60%까지 순차적으로 낮춰 지급하게 된다.

2안의 경우 정년 이전에는 임금조정이 없지만 58세부터는 70%를 시작으로 50%까지 임금지급률 감소폭이 더 커진다. 이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 시대에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기자 iskra@hankyung.com

## 한국경제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A33면 사회

# “재직자만 준 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 전원합의체 후 대법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통상임금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석모씨가 현대·기아차 하청업체인 KRC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KRC의 당시 단체협약에는 휴가비, 설날·추석 귀향비 및 선물, 유류티켓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

다”면서도 “노사 간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자격 요건으로 한 묵시·명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조건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 있는지 등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심 재판부는 석씨가 못 받은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김선주기자 saki@hankyung.com



# 경총, 올 임금인상률 2.3%-임금피크제 제안

### 노동현안 사고 노사관계 악화 예상 재계, 임금체계 개편 등 선제 대응

**60**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 임금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고심하던 경영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노사협상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 ● “임금피크제로 기업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경총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늘게 된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법제화되면서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모델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두 가지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 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임금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임금 인상 조정률도 제시

경총은 이날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하는 내용의 ‘경영계 임금 조정 기본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노동계가 먼저 임금 인상 요구율을 내놓았던 선례로 미뤄 볼 때 이례적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 변경이 급격히 진

행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확대에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줄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려겠다는 것이다.

#### ● 노동계 즉각 반발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사업장별로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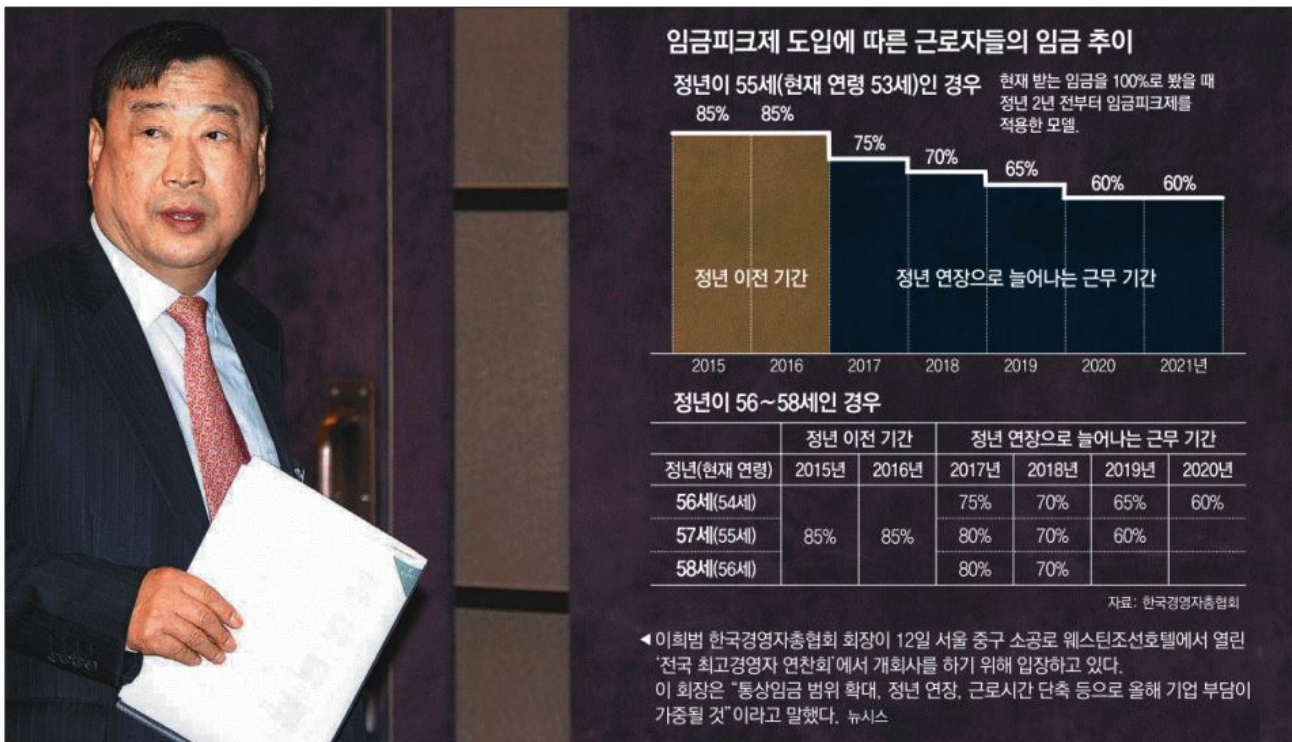
###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부담 40%는 정부-근로자가 분담해야”

### 노동계 “임금 최소 8% 올려야 임금피크제 획일적 도입 반대”

무 성격을 면밀히 따져 숙련도나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다음에 필요한 곳만 선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소 8%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도 당분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선 뒤 처음으로 경총회관을 찾아 이희범 경총 회장을 만났지만 인사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창규 kyu@donga.com·유성열·박진우 기자



# 현재 정년 57세면 ... 58세 이후 임금 줄다 60세 땀 50%

(정년 이후 임금피크 적용안)

## 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대 ... 경총, 임금피크 두 가지 시나리오

1안, 현재 정년 2년 전부터 삭감  
2안, 정년 이후부터 임금 확 줄여  
노동계 “60세까지 제대로 지급을”

대기업 A사에 다니는 김모(54)씨는 현재 정년(57세)보다 3년을 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돼서다. 지금 임금체계를 60세까지 그대로 이어가면 57세에는 연 6000만원, 60세에는 8000만원에 육박하는 돈(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비상이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400명 가까운 인력의 인건비만 222억원(2016년)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임금모형을 어떻게 짜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2일 내놨다. 정년 즈음에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모델이다.

경총이 제시한 임금피크제는 두 가지 유형이다. 각 기업이 운용 중인 지급의 정년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임금을 떨어뜨려 60세까지 줄여가는 1안과 현행 정년까지 임금을 그대로 주고, 2017년부터 매년 임금을 줄이는 방식(2안)이다. 1안을 적용하면 현재 정년을 55~57세로 운용 중인 기업은 53세부터 임금을 떨어뜨려 60세엔 현 임금의 60%를 준다. 58세 정년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60세가 되는 시점에 70%를 지급한다. 2안은 55~57세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은 정년까지는 100% 주고, 이후 확 삭감해 60세 때는 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58세 정년제 기업은 60세 때 55%를 준다.

이 모형을 김씨에게 적용하면, 1안으로는

55세부터 매년 500만~700만원씩 연봉이 하향 조정된다. 2안을 운용하면 58세 때 1800만원, 이후에는 매년 600만원씩 연봉이 떨어진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며 이 모델을 직접 설명했다. 이 회장은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정년연장 의무화) 법제화되면서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 없이 정년 60세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기업의 막대한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며 “임금피크제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의 60%를 기업이 떠안는 방식”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나머지 40%는 고용보험 차원에서 근로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지원금으로 채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이 회장은 “임금피크제는 갑작스러운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말했다. 최대 5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그동안 호봉승급형 임금체계를 성과형 임금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지만(경영학) 연세대 교수는 “경총이 정부와 노동계에 선제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60세로 정년이 늘어난 것은 임금도 60세까지 제대로 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 경총 모델을 정년 57세 A사(대기업, 제조업)에 적용해 보니 ...

연령	정년 전				정년 후		
	55세 미만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근로자 수(명)	상황에 따라 변동						
현재 정년 전부터 조정 시 평균임금(만원)	4000	4500	5000	5500	4800	4200	3600
늘어나는 근무기간만 조정할 경우 평균임금(만원)	4000	5000	5500	6000	4200	3600	3000

\*A사의 평균 순이익률은 2.3%, 부채비율은 290%인 경영 사정 전체

## 2016년 60세로 정년 연장 시 임금지급률 두 가지 시나리오 단위:%

• 현재 정년 2년 전부터 임금조정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현 정년 연령	현 정년 이전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				
	2015·2016년		2017	2018	2019	2020	2021
55세 정년	현 임금의		75(56세)	70	65	60	60(60세)
56세 정년	85%		75(57세)	70	65	60(60세)	
57세 정년			80(58세)	70	60(60세)		
58세 정년			80(59세)	70(60세)			

•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만 조정

현 정년 연령	현 정년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근무기간				
	2016년		2017	2018	2019	2020	2021
55세 정년	현 임금의		70(56세)	65	60	55	50(60세)
56세 정년	100%		70(57세)	65	55	50(60세)	
57세 정년			70(58세)	60	50(60세)		
58세 정년			65(59세)	55(60세)			

### 경총 “임금 개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미 60세로 정년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막대한 기업 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쟁력과 신규 채용 어려움의 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 노동계선 반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고령화 시대에 불가피한 조치다. 이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60세까지 제대로 대접해 주라는 의미다. 61세부터 임금을 줄여 더 일하게 하는 대책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

# 광주 2순환도로 '이상한 요금징수원 임금'

## 3개 영업소 근무조건 같지만 월 최대 19만원 차이

광주광역시 외곽을 연결하는 광주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 요금을 내야 한다. 이 도로는 3개 구간(13.7km)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이용차량은 구간마다 설치된 3곳의 영업소에서 1200원(소형차 기준)을 내야 하지만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설치돼 있지 않다.

영업소 징수원들은 운전자에게서 현금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징수원들의 임금은 영업소별로 최대 월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구간마다 운영 법인이 달라 생긴 문제인데 노동계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광주시가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영업

소별 요금 징수원들의 임금을 파악해 임금이 낮은 법인에 형평성을 고려한 임금 인상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도로 요금 징수원들은 '8시간 3교대'라는 근무 조건은 같지만 구간별 운영회사에 따라 임금은 차이가 크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징수원의 임금은 영업소별로 월 최대 19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대주주인 1구간과 3구간 영업소에서 일하는 징수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월 155만원과 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대주주인 4구간 징수원의 임금은 월 136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4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다른 구간보다 월등히 많다. 지난해 1구간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9457대, 3구간은 3만3134대였지만 4구간은 4만9610대나 됐다.

이런 임금 차이가 생기는 것은 구간마다 대주주들이 설립한 별도의 운영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금 징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4구간 징수원들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한국교원공제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평섭 광주시도로과장은 "2순환도로 운영법인에 인건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징수원들이 임금 등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서울신문

### 여성 비정규직 임금 실태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인 30대 여성 A씨는 최근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혼과 출산 뒤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동료들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5년차 캐디인 그의 월급은 160만원 수준. 근속연수가 쌓여도 수당이 더 붙지 않는다. 특수고용직인 탓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성희롱을 당해도 불만한 지위 탓에 항의조차 하기 어렵다. A씨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자 조카에게 '배우자와 합쳐 월 500만원을 벌 자신이 없으면 혼자 살라'고 했다"며 씁쓸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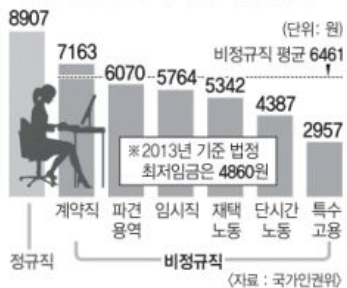
# 자녀 어릴수록, 연차 쌓일수록 차별 심화

32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여성'과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겪는 차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취학·초등생 자녀를 둔 비정규직 여성일수록 임금 수준은 떨어지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차별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으려고 정부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이 겪는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신문이 1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27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월 101만 5740원)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정규직 여성이 시간당 평균 8907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평균 6461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형태별로는 ▲

남정규직 월급과 비교했을 때 아이없는 경우 70.1% 수준 초등학생 엄마는 60.1%뿐 근속 기간에 따른 보상도 없어 10년차, 男월급의 60.9% 받아

'여성 비정규직'의 시급 차별 실태



계약직 7163원 ▲파견용역 6070원 ▲임시직 5764원 ▲단시간노동 4387원 ▲특수고용직 2957원 순이었다. 인권위가 비정규직 여성 827명 등 여성 근로자 9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비정규직 여성 응답자에게 '직장 내에서 자신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남녀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의 월급이 100%라고 했을 때 본인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더니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70.1%, 자녀가 있지만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66.7%,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60.1% 수준이라고 답했다. 연구진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나 근무 형태가 제한적이어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여성에게 직장 내 유사 업무를 하는 남성 정규직의 임금이 100%라고 했을 때 본인의 임금

수준 정도를 물었더니 47.3%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여성 정규직과 비교하면 51.4%, 남성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63.7% 수준이라고 답했다.

연구팀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들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사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자(남녀 비정규직·남성 비정규직)와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비정규직 여성 응답자는 비교 대상자 대비 임금이 71.4%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5~10년 미만은 62.0%, 10년 이상은 60.9%라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은 근속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에 분석된다.

연구팀은 "비정규직 여성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영화표 나누고 자발적 버스광고... '힘내라, 또하나의 약속' 응원 열기

노무법인 '부당해고 119' 대표 김관수(31) 노무사는 "영화표 50장을 썼다". 페이스북에 알려 선착순으로 응답한 '폐친' 50명은 12일 저녁 8시30분 서울 강남 씨지브이(CGV) 영화관에서 <또 하나의 약속>을 봤다. 김씨는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보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해 무료관람 50명 이벤트를 열었다고 한다. "좋은 영화인데 대형극장에서 제대로 보여주질 않아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는 영화표를 찍어 보내오는 100명엔 평생 무료 노무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자발적 응원이 줄을 잇고 있다. 개봉 전부터 예매율에 견줘 적은 개봉관, 단체관람 대관 취소 등으로 외압 논란이 일자, 관객들이 영화표를 사서 주변에 나눠주거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상영관은 개봉 직전 100여개에서 개봉일인 6일 159개, 11일 182개까지 늘었다. 이 영화를 본 이들

50명에 공짜티켓 돌린 노무사 "사람의 중요성을 알려준 영화" 홍보버스 만든 버스회사 이사 "직원들과 얘기하다 아이디어"

폐북 등에 "영화표 나눔" 줄이어 상영관 2배 늘고 관객 20만 '홀쩍'

은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직장인 최빈(32)씨도 <또 하나의 약속> 함께 보기 운동 중이다. 최씨는 개봉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매율이라도 올리려는 생각에 남편과 표 10장을 사서 친구 부부들에게 나눠줬다. "영화 제작할 때부터 삼성에 대한 내용이라 개봉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 이제 개봉을 했으니 영화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원숙 호서대 음악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영화를 보자는 글을 올린 뒤 댓글

로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10명의 관람료를 냈다. 허 교수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한 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몸도 못 가는 채 어눌한 목소리로 '내 팔자러니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영화를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좌절하게 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함께 영화를 본 10명의 마음이 또 다른 50명, 100명으로 퍼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화표를 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전세버스 회사 이사는 8일 버스 한 대를 <또 하나의 약속> 홍보 버스로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영화표를 보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홍보 버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100만원 정도를 들여 홍보 버스로 만들었다. 좋은 영화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고 말했다. 15일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이 버스를 타고 무대 인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의 심셋별씨는 "영화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문의가 하루 30건이 넘게 오고 있다. 한 대학생은 부모님이 청각 장애를 앓고 계신데 많은 장애인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면서 돈을 보냈고, 미국이나 캐나다 동포들이 영화표 비용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회사에서 겪은 부당함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응원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개봉관 수가 적고 관객이 없는 밤 시간대에만 영화가 상영되는 등 여러 상황에 화가 나서 영화표를 보내 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 전세버스 회사의 관광버스가 <또 하나의 약속> 홍보 그림을 옆면에 붙이고 운행하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정환봉 기자 bongje@hani.co.kr

# 들어줘 고맙다, 만들어줘 고맙다



편집국에서

김명희  
문화부장

고백하자면, 지난주 개봉을 이틀 앞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예매가 막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뒤, 담당 기자가 띄운 1차 메모를 본 내 첫 반응은 이랬다. “생각보다 많네.” 70여개관이었다. ‘저예산에 사회적 이슈 영화가 이정도면 뭐...’ 예매가 취소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의혹만 갖고 기사를 쓸 수 없잖아.’ 저녁이 되어 한 체인이 15개관을 3개관으로 줄였다는 말을 듣고서 야비로소 기사를 쓰도록 했다.

굽튼 반응에 은연중 작용했던 생각은 이런 것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장들이 개봉관을 적게 잡은 것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 명백한 외압의 증거가 있거나 <천안함 프로젝트>처럼 개봉 뒤 상영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영화는 상업영화 아닐 거다.’ 흑백논리와 폭로성 성격만 강조된 작품이라면 시장논리로 판단했다는 극장을 비난할 순 없다.

조지 오웰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학은, 예술은 근본적으로 정치성을 띤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를 둘러싸고 진영논리가 입혀져 보수건 진보건 한쪽

의 주장이 100% 진실인 양 호도되며 여론이 증폭되는 건 또 다른 일이다. 이 영화 상영 문제로 단체들이 극장에 항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던 건 그 때문이었다. 지난 주말 전까지 얘기다.

각 지상파에서 영화정보 프로그램을 쏟아내는 주말, 그 어디에도 <또 하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다. 화제작은 다양하게 변주해 몇주씩 내보내고, 저예산이나 예술영화도 빠뜨리지 않던 프로들이다. 박철민, 윤유선, 김규리, 이경영 등 낯익은 배우가 대거 등장하는 극영화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보수적 신문은 말할 것도 없다. 상영 시스템에 눈을 돌리면, 개봉 뒤 반응에 따라 스크린이 늘어나는 슬라이딩 방식이 살아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개봉 당일 한꺼번에 걸리는 와이드 릴리스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난 주말 스크린은 192개가 됐지만 서울시 내만 봐도 3대 체인의 메인극장을 포함해 25개구 중 10개구에선 이 영화를 볼 수 없고, 아침 한번 밤에 한번 트는 곳이 상당수다. 이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사실 상영을 둘러싼 이런 조건보다 내 고정관념을 흔든 건 영화 자체다. 삼성기흥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백혈병에 걸려 끝내 숨진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의 투쟁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거대한 벽 앞에서 느꼈을 순간 순간의 두려움, 고민, 절망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던가. 눈물을 강요하지 않지만 극영화가 주는 공감의 힘은 활자화된 기사나 방송다큐와는 또 다르다.

몇년 전 경제부 기자 시절, 한국인의 백혈병 통계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가장 자주 들었던 논리는 ‘삼성이 그러면 다른 반도체 공장에선 그 몇배의 환자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난 여전히 그에 완벽히 반박할 논리도, 백혈병이 반도체 공정과 직결됐다는 확신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삼성이 당당하다면 적어도 당시 어떤 화학물질들이 사용됐는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시 근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작업조건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약속>은 그런 ‘상식’을 이야기하는 영화다.

영화 속, 딸이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서 숨진 뒤 아버지는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윤미가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라고 말한다. 현실에서 이종란 노무사는 생전의 황유미씨를 만나지 못했다. 그 허구의 대사가 절실하게 들렸던 건, ‘그들만의’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2014년 한국 사회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dora@hani.co.kr

## 내일신문

2014년 02월 12일 수요일 012면 금융

# 고용 불안정할수록 빚 갚기 어렵다

## 임시일용근로자, 상용직보다 빚 못갚는 비율 5배 높아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빚 갚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영목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의 고용유형별 상환 부담과 부실요인 분석’ 논문에서 고용유형과 가계부채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미취업자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가 상용직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교수가 2010~2012년 3년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 중 상환불능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고용유형은 미취업자로 15.8%

였다. 그 다음이 임시일용근로자로 금융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구가 14.3%에 달했다. 이는 상용근로자 가구의 3.1%만이 금융부채를 갚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5배나 높은 것이다.

이는 이들이 저소득·저자산 계층에 편중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조사에서 임시일용근로자의 2012년 평균 경상소득은 2401만원으로 상용근로자(5672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미취업자의 경상소득은 1801만원이었다. 다만 미취업자는 자산면에서는 소득만큼 빈곤층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았다. 같은 해 미취업자의 자산은 2억7711만원이었다.

그러나 임시·일용근로자들은 자산에서도 가장 하위계층에 편중돼 있었

다. 2012년 임시·일용근로자의 평균 자산은 1억106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자산 3억463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빚을 진 가구가 느끼는 상환부담에서는 상용 또는 임시·일용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부담을 점수화해 분석한 결과 고위험 가구비중이 가장 높은 고용유형은 무급가족종사자(2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0.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7.7%)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빚을 못 갚는 경우는 임시·일용근로자나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더 많았다.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DTA(총 부채/총 자산)가 70% 이상인 가구 비중은 임시일용근로자(20.9%)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가운데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9.5%)가 가장 높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고위험가구 비중은 7.4%였다.

배 교수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가계부채 부실이 단순히 가계의 과다차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정, 자영업자의 영세화 등에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배 교수는 “부실가계에 대한 구제금융 확대, 채무기한 연장, 채무이자경감 등의 정책은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금융부채 상환불능가구를 줄이는 정책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 폭설희생 실습생 '야근 안한다' 협약 맺고도...

## 전교조 "계약 위반 책임 물어야" 회사쪽 "실습생이 원했다" 해명

지난 10일 밤 현장실습 과정에 야근근무를 하다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숨진 울산의 전문계고 3학년 김아무개(19)군이 현장실습에 앞서 회사 쪽과 '야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직접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 2월12일치 10면 참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입수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이 협약

서 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에는 "갑(회사)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을(김군)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군은 협약과 달리 지난 10일 밤 10시를 넘긴 10시19분께 야근근무를 하다 변을 당했다.

이 협약서에는 김군의 서명과 함께 김군을 고용한 7사의 최아무개 대표와 김군을 실습 보낸 학교 임아무개 교장의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다. 협약서에는 김군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올해 2월12일 졸업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당은 3만8880원이었다. 김군은 이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운반, 교체

하는 일을 했다.

이에 대해 김군의 학교 관계자는 "회사에서 김군에게 야근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김군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며 자청해 잔업과 야근을 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야간근무는 김군이 원해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사업자의 계약위반 책임을 확실히 묻고 교육청도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김군이 현장실습과정에 야근근무를 하다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 경향신문

# 1월 청년 실업률 8.7%... 4년 만에 '최악'

## 설 앞두고 임시일용직 등은 '반짝' 늘어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만명 이상 늘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8.7%로 치솟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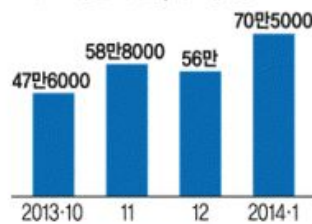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달 취업자는 247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만5000명 증가했다. 2002년 3월 84만2000명 이후 12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1월은 설 명절 덕분에 임시일용직 등이 증가한 데다 비고 대상인 지난해 1월 고용이 워낙 저조했던 탓에 증가폭이 더 커졌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수 증가는 경기회복 조짐 외에도 설 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

취업자수 증가 추이

단위: 전년 동월 대비 명, 자료: 통계청



인하고 있는 만큼 고용 상황은 2월 고용 동향을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명절 특수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임시일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1만 5000명 늘어난 630만5000명이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1년 전보다 각각 8000명, 2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5%였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7%였다. 2010년 1월(9.3%)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이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1월 취업자 70만명 늘었다지만...

# 청년실업률 8.7% 4년만에 최악

경기회복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50세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많은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만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청년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청년실업률은 8.7%를 기록해 지난해 11월(7.5%) 이후 두 달 만에 1.2%포인트나 급등했다.

1월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많은 청년이

구직활동에 나서는 기간이라 실업률이 다른 달에 비해 다소 높다. 올해 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청년실업률은 다른 해 1월과 비교했을 때 2010년 1월(9.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고용시장 전체적으로는 다소 훈풍이 불고 있다.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2475만9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70만5000명이나 늘었다. 월간 증가 폭은 2002년 3월(84만2000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한 취업자 수도 1월에 20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32만명이 늘어났고, 60세 이상도 21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했다. 반면 청년계층인 15~29세 연령대에서 취업자는 7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54만6000명이 늘어 고용을 주도했다. 농림·어업 분야에서 4만7000명이 늘었으며 건설업 취업자도 1만8000명 늘어 부동산 경기 회복이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A6면에 계속

노영우 기자

## 매일경제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A06면 경제

# '돌아온 경력단절女' 고용 끌어올려

A1면서 계속

## 고용률 늘었지만 청년실업 최악

취업자 지위별로는 상용직 취업자가 60만명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도 8000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보다 1.1%포인트 올랐다.

그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월 대비 74만9000명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1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구직행위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만2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이유를 살펴보니 가사종사자에서 20만6000명이 줄었고, '쉬고 있다'는 응답자 중 15만4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만큼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3.5%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단위=%)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학생 등 청년들이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을 높였다.

#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다



**경제와 세상**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서양 속담은 그 자체로는 참이다. 그러나 친구의 기쁨을 거리낌 없이 기뻐해 주기가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해 주기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다. 너무 아픈 사랑만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너무 부러워도 부럽다 말하지 못한다. 마음의 우선순위를 따져 서넛 안에 드는 지인에게 부러울 만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 한편으로 그 때문에 생겨날 그와 나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력 격차가 가져올 불편함도 걱정하곤 했다. 부끄럽게도 내게 생기는 좋은 일은 누리 마땅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누군가가 느낄 불편함에 대해서는 배려하려 들지 않았다.

이들테면 자타가 인정하는 ‘매우 좋은’ 대학의 교수를 만나면, 그이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 나의 특성을 이것저것 찾아보며 위안을 삼다가도 그가 가진 사소한 장점이 나 힘 하나에 자존감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곤 했다. 마치 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연적을 둔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 이의 심정처럼. 그 강력함이 외모나 재능, 언변 같은 개인적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건 그 어떤 제도적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건 결과는 다르지 않다. 사

랑을 잃은 이에게 더 좋은 사랑이 남아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듯이, 언젠가는 너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은 결코 위로를 주지 못한다.

삼성그룹이 대학별로 신입사원 총장추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거센 비판 여론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 삼성은 어느새 한국 사회에서 세속적 성공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번 일에 대한 반응도 복잡미묘하다.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할당인원 때문에 내심 뿌듯해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할당 인원이 생각보다(혹은 생각한 대로) 적어서 시뻘말로 열폭하는 경우도 있다. 해묵은 지역감정이 건드려지는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꽤 그럴듯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응이 이토록 복잡미묘한 까닭은 실상 우리의 욕망, 그 작동방식 자체가 그만큼 복잡미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벌문제가 걸릴 때면 항상 등장하는 능력주의가 지닌 양날의 칼과도 같은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순수한 능력만 겨루도록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이 있을 수 없듯이, 그 어떤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순수한 능력”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며, 그 사회란 결국 개인들이 모여 이루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필요 이상

의 자부심과 부당한 열등감에 빠지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는 것, 더욱 근본적으로는 삼성이건 어디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존재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국가나 경제민주주의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자본의 오만함이나 방약무인을 욕하기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출신 대학이 능력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사용되는 누구나 아는 그 현실을 이윤추구 조직인 기업에 모른 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망하기 때문이다. 이미 하던 일이 드러났을 뿐이며, 삼성이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다. “능력”이 개인의 출신 배경이나 인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학벌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문제이므로,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꿔보아도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대학교육이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얻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교육부로 상징되는 국가기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나쁜 자본”을 욕하는 것처럼이나 “나쁜 국가”를 욕하는 것 또한 문제를 없애지는 못한다. 노동, 그리고 시민이 자본과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할 때에야 비로소 “덜 나쁜 국가”라도 얻어질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인 것이다.

## 국민일보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010면 사회

### ‘경제발전 공로’ ‘피해 회복’ ‘건강 상태’ 판결문서 되살아나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기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2년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여론은 이를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했다. 전국 형사법관들은 그 얼마 뒤 부산에 모여 기업 범죄에 관대했던 과거 관행을 바꾸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1년6개월이 흐른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은 모두 1585억원. 양형 기준상 300억원 이상 배임죄의 경우 기본 형량 5~

## 재벌 엄벌주의 기류 바뀌나

### ‘3·5 정찰제 선고’ 뒷말 무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년에 감경 요소를 감안해도 최소 징역 4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이른바 ‘3·5(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찰제 판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김 회장에 대한 선고 이유로 ‘경영상의 불가피성’ ‘경제발전 공로’ ‘피해 회복’ ‘건강 상태’ 등을 들었다. 구자원 LIG 회장도 이날 피해자들과의 합의, 78세의 나

이 및 수술 전력 등을 이유로 김 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는 과거 ‘3·5제’ 판결을 받은 여러 재벌 총수들의 판결문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08년 7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불법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리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2011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향후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 다짐을 했다” 등의 사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나왔다.

2004년 8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판결도 ‘산업과 교육발전 공로’ ‘국민훈장 수상 경력’ 등이 열거된 뒤 3·5제 선고로 마무리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우·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1심이나 2심에서 비슷한 논리로 3·5제 선고의 수혜를 입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bi.co.kr



# “400조 쌓아둔 대기업 지원보다 중기 판로 개척해줘라”

##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 ① 균형입은 지원정책
- ② 연구개발 보조금 물이주기
- ③ 공공조달시장서 '포식'
- ④ 정책금융 지원 양극화
- ⑤ 불공평한 세금감면
- ⑥ 재벌과 관료의 밀월
- ⑦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과 대안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은 '나와도 밀접하게 얽히는' 일이다. 나랏돈이 대기업으로 쏠리면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 등 다른 경제 주체의 기회와 몫이 줄기 때문이다. 1960~70년대 이후 지속해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은 세계, 금융, 예산, 조달 등 공격적 지원의 본래 체계를 왜곡해왔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등 4명을 불러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물어봤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왼쪽부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7일 서울 미모교 한겨레신문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선대인** 이번 기획은 꼭 필요한 걸 한 것 같다. 대기업에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개별적인 기사는 많았지만 체계적, 종합적인 접근은 드물었다. 신선하고 의미있었다.  
**정창수** 그전에 (대기업 집중에 대해) 막연하게 봤었던, 정리하지 않았던 걸 처음으로 도식적으로 나타내는데 것에 의미가 있었다. '업두를 낚고' 해야 할까.  
**강병구** 최근에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후 복지 공약은 대거 축소·폐기·연기되고 있다. 기존연금, (4대) 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보육 문제 등 사회·중산층과 관련된 복지 공약이다. 그 그거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대기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 집중은)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의 시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산업 정책, 조세, 금융 정책, 노동 정책에 집약돼 나타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먹거리를 말하는 데, 먹거리는 중요하지만 기업의 먹거리는 정부와 국민의 먹거리가 아니라 기업 이익이 문제다.  
**선대인** 수십년 동안 자원 배분을 그런 방향으로 해온 거다. 80년대까지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 주도의 토건사업으로 고정성장해온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한국의 성장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다. 그런데 과거 습관의 힘이 지속되고 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오세훈 시장 시절 정책자문관 공무원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문화와 복지'로 포장은 돼 있는데 다 보면 사실상 토건사업인 경우가 많았다.

**정창수** 과거 '정영수'라고 하면 강력한 경제 권력인데 요즘은 거꾸로 돼 있다. 경제 권력 중심으로 돼 있다. 제 경험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공공불용자(해의 자원 개발에 기업이 참여하면 정부에서 저리로 용자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만 갖게 하는 제도) 사각 계획을 냈더니 별채처럼 달려온 이들의 다수가 대기업 사람들이었다. 부처 주무과장과 5개 (대기업) 정무사의 전무들이 와서, 과정은 배석만 하고 있고 (대기업 전무들이) 온 것만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선대인** 정책과 제도 형성의 접근권이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완전히 차이가 난다. 자원 배분을 하는 데 미칠 영향력의 크기가 (대기업) 크다. 유착 시절에 기획재정부 관료, 몇몇

단체는 중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윤공유제'다.  
**정창수** 최고의 이윤 공유는 조세다. 지금 곳곳에 안 잡히는 게 있다. 모든 구조가 별채처럼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 이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 방향을 조금이라도 어디에 트어내 따라 경제 방향도 틀어질 수 있다.  
**강병구**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들의 공공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처럼 기회의 지속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한다 보니 중소기업에 보충·육성할 정책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런 영역은 제도적 지원을 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제

이 아니다. 아무도 안하려 한다. 그렇지만 코트라 등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이기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강소 중견기업이 된다.  
**강병구** 기존의 한국 경제가 성장 위주의 이윤 주도형 성장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소득 주도형으로 패러다임(轉)을 전환해야 한다. 각 생산 과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이 골고루 분배되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 성장과 분배가 상생할 수 있다. 효율성도 성장 지상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중요한 시간으로 강조되지만 좀더 장기적 시계열로 늘려 보면 연례 사회 안전망 지출의 경우 현실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지출로 보여도 국가의 잠재 성장력에는 기여할 수 있다.  
**선대인** 결국 과거에 우리가 성장한 방식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

**대기업 증세 안해  
복지공약 폐기되거나 축소  
대기업 집중은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문화화장 스투디오를 만든다는데 예술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 프로그램은 없고 건물은 몇백억원씩 들여서 짓는 식이다.

**전성인** 대기업에 각종 지원을 하면서 수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화를 계속 연장해가는 것이다. 대기업에 돈을 쥐어서 대기업의 성과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우리 경제의 성과와는 괴리가 크다. 우리 경제의 성과를 위해서 공격적 자금을 다른 데 써야겠다. 이런 합의를 해야 바뀔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결국 하는 일이 규제 완화다. 서비스업을 중점 산업 대상으로 삼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도 옛날 패러다임 그대로 가는 거다. 공공부문 개혁도 목표가 적자, 부채 수치 줄이기에만 있다. 정부 지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시정하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선대인** 굉장히 많은 자원(의 배분)을 관료들이 행사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 맡은(은) 예산 안 95%가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반영된다). 결국 국은 관료들이 만든 건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시각에서 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정도가 되면 3년 뒤에 자기 직장이 그 산하 기관과 관련 기업에 있다. 금융업은 건설업에 이익 유착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강병구** 대기업의 덩치가 크고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원천 기술의 개발 등 우리나라 잠재 성장력 확보에 (대기업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없다. 문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1960~70년대 이후인 지금까지도 개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반려동물·성형수술에 대해  
알뜰살뜰히 세금 거두면서  
대기업에 퍼주고  
저소득층 지원은 줄어**

**정성인** 어떤 이유론든 (대기업에 대한) 공격 지금 지원을 줄이기가 어렵다면 낙수효과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전혀 흘러내리지 않고 있어서 문제다. 바로 위의 대기업 이익을 내면 흘러내려가는데 대해 첫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규제 완화하겠다는 것  
옛날 패러다임 그대로다  
양극화 시정 노력은 안보여**

정 지원도 성과를 잘 들여다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대인**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재벌 대기업들이 독과점 담합하는 여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진출한 부분인데도 대기업의 틀바구니에서 각종 기술이 탈취된다든지 중소기업이 잘하는 분야에서 수익성 나쁜 대기업이 들어가서 시장을 뺏는다든지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산업 생태계는 사라져온 결과다. 지금이다. 삼성전자가 휘청거린 한국 경제가 출몰하는 구조가 지속해서 선 안된다.

**정성인** 중소기업 지원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지금은 생산 과정에서 주로 인풋(인력)을 지원해주는 거다. 이는 성과 평가가 굉장히 어렵고, 정책적 목표 달성도 어렵다. 자주 인풋을 지원하면 '피터팬 신드롬'(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에 빠진다) 판로를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하나는 조달 시장이 있다. 직접 사주는 거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쉽게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지금 해외의 주재 공관이 있는데 대기업 위해 대기업 이익을 내면 흘러내려가는데 대해 첫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과거엔 정치권력이 강했는데  
요즘은 경제권력이 중심  
예결위서 기업 지원세 손댔더니  
업계서 별뿔처럼 달려오더라**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수요 중심으로 바뀌어 한다. 소득 주도라고 가지는 것이다.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한다. 소득을 늘려 주어야 늘어나면 그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늘어나서 선순환으로 가는 방식이다.

**강병구** 공공 자원의 배분 문제는 공공의 선택 문제다. 정치적 의사 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공공 자원이 얼마나 사회 구성원에 배분되는가에 대해 다수 국민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재벌과 관료와 정치인들 사이에 행정원 철의 삼각형을 깨는 정치 체제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공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어렵다.  
**정성인** 대기업 혜택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 환을 등 거시 경제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문제는 수출 대기업에 이미 마한 보조금이다. 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를 부과해 수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이는 위기 때마다 더욱더 늘어나서 외환 보유액을 확보해야 한다.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까 위기의 주범인 섹터(부문에) 계속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 부분도 (한겨레)에서 향후 다뤄주길 바란다.(끝)